

-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2023. 5.



대구광역시 달서구
<http://www.dalseo.daegu.kr>

[경제지원과]

제안설명서

설명자: 경제지원과장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조정 등을 위해 2005년 설치된 이후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어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 폐지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

- 본 조례안을 2023. 4. 11. 부터 5. 1. 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 2023. 5. 18.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본 조례 폐지에 따른 비용추계는

-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 이 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2005년 설치된 이후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어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오니,
-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00923067
------------	----------

제출년월일: 2023. 5.26.

제 출 자: 달서구청장
(경제지원과장)

1. 제안이유

- 대구모점포 및 준대구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조정 등을 위해 2005년 설치된 이후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어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4. 11.~5. 1.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 심사: 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비대상

4)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5)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음

6) 조례·규칙심의결과: 원안가결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① 유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에 각각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2.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4. 제1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한 분쟁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소비자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매업·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등,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